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0. 19 .

복지·건설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2. 10. 9. / 강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2. 10. 16.

다. 상정일자 : 제20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2.10.19)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및 보육환경 변화에 따라 보육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관련 용어 정비

(보육시설 ⇒ 어린이집, 종사원 ⇒ 교직원, 시설장 ⇒ 원장)

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기준 및 기능 개정(안 제10조~제11조)

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안 제29조)(3년 ⇒ 5년)

라.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3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6조, 제4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제9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12.8.30. ~ 2012.9.18.) 결과 : 내부의견 있음
-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입법 예고 결과	제출의견	조치내용
내부 의견	○ 제23조 제3항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에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개정 내용이 모든 수입을 구금고로 세입조치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	○ 반영 - 제23조 제3항을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한다 ”로 현행 조례 내용 유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임석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한다)(2011.6.7, 2011.8.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한다)(2012.2.3.)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원” 및 “시설장”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교직원” 및 “원장”으로 개정한 바,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생각됨.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기능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법 제6조 및 법 시행령 제6조,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 **안 제29조(위탁기간)**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도록 “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서 신설된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관리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3조(지도감독)**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근거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여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는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는 사회복지관 위탁 시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탁체 선정 시 위탁기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